

인도 정부의 제조업 부진 극복 대책

작성자 : 이정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작성일 : 2014년 7월 11일

■ 최근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환경 개선,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어, 7월 10일 예산안에서도 제조업 육성을 위한 조치를 발표함.

- 인도 상공부는 7월 2일 방위 산업을 포함한 일부 산업의 면허(Industrial License)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을 시작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변경 및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¹⁾
 - 그밖에 조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조세제도 개혁 및 간소화, 명확한 토지 분류의 규정 마련과 매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토지법 개정 등을 논의 중
-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공장법(Factories Act)개정 계획은 전근대적이었던 인도 노동법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임.²⁾
 - 공장법 개정은 우선 최저임금상승, 추가 근로 확대(50시간 →100시간), 여성의 야간근로 허용 등 근로자 권익 향상 내용을 포함한 1단계 법 개정을 추진
 - 본격적인 노동법 개혁에 해당하는 2단계 개정은 고용 유연화를 비롯한 보다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여 논의 중에 있음.³⁾⁴⁾
- 또한, 인도 정부는 7월 10일 발표한 예산안에서도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 주요정책으로는 방위산업의 FDI 규제완화 (26%→49%), 외국계 제조기업에 대해 소비자 직거래 허용, 특별경제구역(SEZ) 활성화⁵⁾, 원재료 관세 인하, 2억 5000만 루피(약 420만 달러) 이상 투자 제조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7개의 산업 단지 건설, 산업 회랑 개발 전담조직 설치 등이 있음.

1) 인도정부는 산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산업허가제(Industrial License)를 운영하였으나, 1991년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음. 현재는 방위, 주류, 담배 산업 등이 허가 대상으로 남아 있음.

2) 공장법이란 공장의 등록과 허가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동 법안은 공장 노동자의 권익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3) 인도는 1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동시장이 경직되어 있음.

4) Reuters(2014.6.30), Economic Times(2014.7.8)

5) 6월 말 인도정부는 중국 산업단지 건설을 승인 및 중국정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SEZ 수준의 혜택제공을 약속함.

■ 인도의 제조업 부진은 경기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모디 신정부는 제조업 부양에 주력하고 있음.

- 인도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80년 15%를 돌파한 이후 30년 이상 15%(±1)선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지난 2년간 제조업 성장률은 평균 0.1%에 그쳐 인도 경제 저성장(2012년 4.5%, 2013년 4.7%)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년간(2004~2011년) 제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500만 개에 불과하였음.
- 매월 100만 명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경제활동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신규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여 인도는 심각한 청년취업 문제를 겪고 있음.

그림 1. 인도의 산업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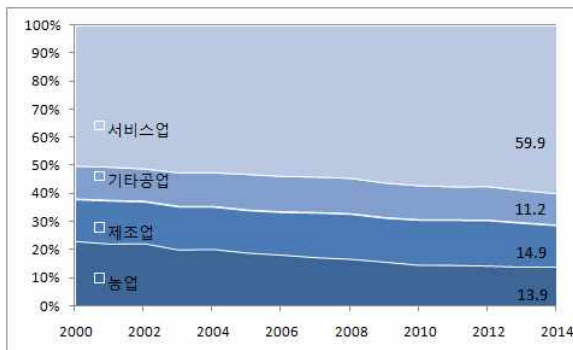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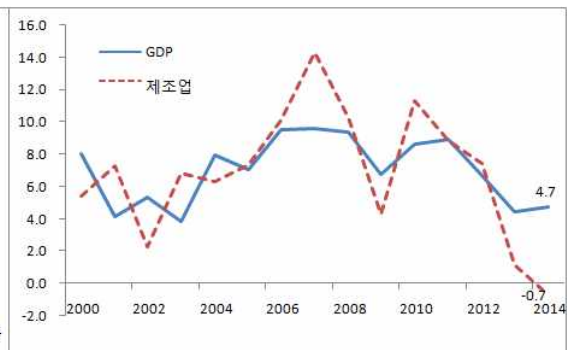


그림 2. 인도의 전체 GDP 및 제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CEIC

■ 인도 신정부가 제조업 부양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전 정부와 달리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의존성이 낮아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는 등 제조업 부문의 기업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모디 총리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구체적인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과거 UPA정권도 제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실행력이 부재하였음.
- 특히 노동법 개혁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
- 40여 개에 달하는 인도의 복잡한 노동 관련법은 인도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과거 인도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발 및 정치적 이권 상실을 이유로 노동법 개혁에 소극적이었음.

〈자료: Budget 2014-2015 speech, Reuters, Economic Times 등 현지 언론 종합〉